



대학 등록금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정 봉 주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I. 들어가며

- 매년 봄만 되면 우리나라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음.
- 실제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5년간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6.1%로서 평균 물가 인상률의 2배에 이르고 있고, 2005년 사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은 606만 원이며, 일부 의과대학의 경우 1,000만 원에 가까운 등록금을 고지하기도 하였음.
- 다수 사립대학은 운영에 드는 총 비용의 약 70% 가량을 등록금에서 충당하는 취약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역시 빈약하여 등록금 문제의 해결이 더욱 요원하게 느껴짐.
-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폭넓은 시각을 갖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는 구체적인 접근을 통하여 문제 해결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임.

II. 대학 등록금 문제

1. 등록금 갈등 요인

1) 낮은 법인전입금, 무분별한 적립금

- 사학의 재정구조가 취약하여 법인전입금 재정운용 수익 기준 1% 미만 대학은 156개 중 72개나 되고, 전체적으로 법인의 전입금 비율은 대학 운영비의 10%에도 미치지 못함.
- 대학 운영에 있어 등록금 의존률은 70%에 달해 학생 등록금 전액이 곧 학교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산 총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등록금 인상액과 맞먹는 금액이 매년 특별한 이유없이 적립되고 있음.
- 2002년 등록금 인상액의 84.8%에 해당하는 4,680억 원 정도가 적립되었음
- 사립대학의 누적 적립금은 4조 1,518억(2004년 통계) 원에 달함.

- 등록금 인상액 대비 적립금 증가액은 2003년까지 70%를 상회하였고, 일부 대학의 경우 이월 적립금이 등록금 인상액보다도 많았음.
- 사립대학의 설립 목적이 영리 추구에 있지 않지만, 등록금을 인상하고 또 인상액의 상당 부분을 적립하는 것은 사립대학이 학생 등록금으로 자산을 늘리는 모양새가 되고 있음.
- 특히 학생들의 등록금을 적립하는 것은, 지금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비를 후배들의 교육환경을 위해 저축하는 것이 되어 현재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는 법적인 다툼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음.

2) 고등교육의 수익자 부담 원칙

- 현재 우리 정부는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 BK21, NURI 사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에 들어가는 공교육비 현황은 열악한 상황임.
- OECD 국가가 부담하는 고등교육비 부담 비율은 평균 78.1%에 달함.
- 미국과 일본의 경우, 공공부담 고등교육비는 각각 45.1%와 41.5%로 50%에 가까움.
- 우리나라의 공공부담 고등교육비는 14.9%로서 사부담 비율이 무려 85%에 달함.
- 이같은 현실은 고등교육의 수익자가 '개인'이라는 시각에 의해 합리화 되고 있음.

2. 대학 등록금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1) 고등교육 수익자에 대한 새로운 관점 필요

- 대학교육은 '개인의 선택' 인가, '사회적 책임' 인가?
- 그동안 우리 사회는 "대학교육은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므로 '수익자 부담' 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음.
- 해외 여러 나라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사회적 수익률을 따져본 자료를 보면, 미국의 경우 사적 수익률은 11%, 사회적 수익률은 10.8%로 사적 수익률이 월등히 높다고 할 수 없음(OECD 2005년 통계)
- 덴마크의 경우 사적 수익률, 사회적 수익률 공히 4.08%로 같은 수준임.
- 고등교육은, 개인에게 일자리와 고소득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사회에는 생산성 향상, 범죄 발생률 축소 등을 가져옴
- 따라서 고등교육에 드는 비용을 오롯이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사회와 개인이 나눠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봐야 함.

2) 대학 선(先)무상교육 제도 실시

- 현재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는 10년 거치 10년 상환에 7% 이자율로서 취업에 성공한 대학 졸업자에게 있어서 나쁜 조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4년제 대학 졸업자의 65%만이 취업을 하는 현실(2005년 통계)에서 이 제도는 청년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음.
- 또한 2005년 2학기~2006년 1학기 중

복 대출자는 모두 81,312명으로 2006년 1학기 대출자의 31%에 달함.

- 한 학생이 대학 재학 시절에 몇 번만 학자금 용자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졸업 후 상환금액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 될 것임.
- 따라서, 현재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학 선(先) 무상교육제'로 나아가야 함.
- '대학 선(先) 무상교육 제도'는 국가가 등록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졸업 후 일정 수입 이상의 직업을 가진 경우에만, 그 수입의 정도에 따라 '졸업세'의 형태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임.
- 이 제도는 고등교육과 청년실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임.
- 이는 저소득층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와 부모의 저소득으로 기회를 자칫 잃을 수 있는 젊은 학생들에게 제2의 기회를 주는 정책이 되는 것임.
- 물론 이 제도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 투자 및 회수 계획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상환 기피의 문제, 등록금 인상에 대해 학생들의 즉각적인 반발이 적어지는 점을 악용한 대학의 일방적 등록금 인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3) 등록금 인상 사유에 대한 사회적 검증

-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의원 대표발의)은 등록금 인상 사유에 대한 사회적 검증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직전 3개년 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 이상 인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 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에서 제출한 사유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 통지하는 방안임.
- 흔히 이 제도를 대학 등록금 인상을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 이 제도의 취지는 그동안 대학들이 학생 등록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손쉽게 재정을 확보해 온 것에 대해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줌으로써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외에도 다양한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독려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음.
- 또한 과도하게 적립금을 쌓아 두고서도 등록금 인상 폭이 높았던 대학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음.
- 뿐만 아니라, 대학 등록금을 무조건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교육인적자원부는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받들어 대학의 인상안을 동의해 줄 것을 전제하고 있음.
- 즉, 이 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대학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특히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대학구성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것임.
-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대학에 통보되지만 이의 준수 의무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뿐만 아니라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음.

- 대학 자율을 강조하는 미국에서도 등록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대학의 재정 건전화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상당히 혹독해 보이는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
- 2006년 3월에 이미 하원을 통과한 College Access and Opportunity Act는 지난 3년간의 등록금 인상률이 같은 기간 물가 인상률의 2배를 넘는 경우 연방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교육부는 이를 교육부가 운영하는 대학교육 기회 관련 웹사이트에 공개함.
- 또한, 교육부에 보고된 대학들 중 상위 5%에 대해서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해당의 운영 전반을 검토하도록 하고 2년 연속 보고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경고'를 부여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에는 등록금 문제 결정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되지만 이는 학생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 의무설치기구를 통해서임(이사회, 대학생활위원회, 학술위원회 등).

Ⅲ. 나가며

1. 이상의 논의에서 등록금 문제 해법으로 세가지의 관점 내지는 정책을 소개함.

- 1) 고등교육 수익자에 대한 새로운 관점 필요
- 2) 대학 선무상교육 제도(Study Now, Pay Later) 실시
- 3) 등록금 인상 사유에 대한 사회적 검증

2. 각각의 관점과 정책은 차근차근 준비되어 가는 속에서 서로 맞물리고 연결될 것으로 기대됨.

3. 우선적으로는 '등록금 인상 사유에 대한 사회적 검증'을 제안함.

- 대학과 학생들 간의 등록금 갈등을 정당하게 해소하는 동시에
- 대학의 책무성 강화 및 학생과 학부모의 성숙한 의식 함양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